

오피니언

월/요/광/장

곽수중



대선 후보들의 유세전이 한창이다. 내년 2월 말이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은행의 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0.25% 인하 확률이 60%, 0.5% 인하 확률이 40%다.

대선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환율이 890대를 기웃거리길 것 같다.

고유가도 걱정된다. 석유수출기구(OPEC)는 지난 주 모임을 중단시키려는 개세기도 없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내년 8, 9월 중 확대 재생산될 경우 일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는 것이다. 곡물가격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장담할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소비자들이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대외 경제여건이 새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의 전부는 아니다.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4~5%대에서 6~7%로 올리는 것은 틀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반감지 않는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은 임시방편의 술책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장기발전전략 차원의 정책이다. 지속적인 개발, 발전되어야 할 경제정책은 후임 정부가 반드시 승계해야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10년 이상 지속될 국가전략과 비전을 내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친미, 친중, 좌파, 우파 등 4색당과 식으로 국론이 더 이상 분열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격돌할 때 한반도의 미래는 누가 결정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유평파적인 이상주의에 국민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리더십을 보이면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 기업이 열심히 밥을 흘려 글로벌경쟁에서 앞서 나가면 존경과 경의를 보여야 한다.

서로가 '사나니 못사나니' 다투어 온 날이 많아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지만 손을 맞잡으면 서로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피해 확산 막아야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유출된 원유가 전남 해안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고는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 정박해 있던 14만6천800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를 1만2천t급 바지선이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원유 유출은 사고 48시간 만에 멈췄다. 하지만 이미 150km의 해안에 기름막이 형성됐으며, 82개 어장 2천100ha, 6개 해수욕장 221ha가 기름으로 뒤덮였다.

유출된 기름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씨스린스호 침몰사고 인근 해역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방재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름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해안은 물론 남해안까지 피해가 확산돼 환경 대재앙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기름띠가 덮이면 그 뒤에 방제작업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지금이 사고 때의 유출량 5천035kl의 2배나 되는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인 셈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원인을 정확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혼란 부추긴 수능 등급제 보완 서둘러라

올해 처음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가 대입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수험생들은 응시과목마다 9개 등급으로 표기된 성적표를 받았지만 자신의 등급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등급제에 대한 반발은 폭발 수준이다. 교육 당국의 홈페이지에는 연일 등교를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고 일부 네티즌은 등급제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등급제 도입은 수능 채점결과 언어·수리·외국어·탐구 등 모든 영역에서 등급 비율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여 변별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등급 비율이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가장 우려됐던 '등급 불평등(특정 등급에 동점자가 몰리면서 바로 아래 등급이 비어 현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등급제 도입은 수능 채점결과 언어·수리·외국어·탐구 등 모든 영역에서 등급 비율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여 변별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등급 비율이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가장 우려됐던 '등급 불평등(특정 등급에 동점자가 몰리면서 바로 아래 등급이 비어 현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등급제 자체에 대한 논란이다. 수능 총점이 높아도 영역별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등급으로 환산하면 더 유리해지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내신 및 수능 등급제를 골자로 한 현 대입제도가 복잡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대학은 수능 및 내신 무력화를 시도하며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혼란을 가중시킨 등급제의 맹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윤춘주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항상 부딪치는 문제가 증거이다. 소송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지만, 사실에서의 사실이란 실재하는 사실이 아니라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합설계사들은 이 합의서 때문에 선처를 받았지만 합의금은 전혀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기다리다 못해 다시 민사소송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자문을 하게 된 회사는 투자회사와 계

기고

김희진



요즈음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말종의 하나가 성공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자자 양해왕의 초청을 받아 해왕을 만났다. 양해왕은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와 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돈만을 목표로 하는 그릇된 성공

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작금의 우리 국민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가정살림이 어렵고 사회생활 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아니면 한탕해서 돈 좀 크게 얻었으면 하는 심정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니다.

그리고 끝에서 "왕께서는 역시 인의를 말씀하시어야 할 터인데 하필 리를 말씀하시니까?" 하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른 아침을 가진 부자가 하나 밖에 없는 가난한자의 것을 탐내는 세상이다.

대과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도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크게 관심이 있다고 내가 아는 진학지도 선생님께 귀뜸해 주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지 못한 성공시대와 그 무리들을 동경하고 함께 하여야 되겠는가!

12월19일 재·보선도 있다...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이자 재·보궐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정권교체일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평화의 기틀을 다진 도약의 10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각 당에서 사활을 걸고 전력투구하면서 유권자의 향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후보자간 구도나 정책선거 실종으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과 실망감으로 투표율은 예년 대선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필 수 없는 이치를 말했다.

비로소 정치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선거과정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한 것이지 아니라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 정치참여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대리인에 불과한 저자이도취에 빠진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저조한 투표율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치러지는 작은 재·보궐선거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안과 정책을 가진 정치인에게 표를 던진다면 이름뿐인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희망의 싸움은 있을 것이다.

합의는 철저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대로 권리의 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려면 정말 신중해야 한다.

동생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해 동생의 장인에게 3억원의 약속어음을 써주었는데, 처가 쪽은 위 약속어음을 받은 후 얼마 있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의 위자료라고 주장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약을 맺었는데 계약 내용 중 "2항 내지 4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의미는 2항부터 4항까지라는 것인데, 회사는 2항 또는 4항이라고 생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중요한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고 말고 싶다. 내가 합의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작성한 후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소송에 이르면 내 손해를 100% 배상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들 두는 것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백화점서 산 신발 A/S 불성실...소비자들 '분통'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신발을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발 안쪽의 가죽이 벗겨지고 변색이 일어나 수리를 맡겼다.

구했고 한곳의 택배회사를 지정하여 착불로 보내라 했다. 이후 분사에서는 다시 염색을 했으니 일단 수선된 신발을 보고 다시 불만 사항 등을 연락하자고 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전화 한통 없이 무소식이다.

분사에서 신발 상태를 본 뒤에 말할 수 있다며 신발을 다시 분사로 보내 줄 것을 요구

▲곽한려·광주시 서구 화정동

無等鼓

흔히 'কেদা পাশ'로 알려진 '무스타파 케달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영웅이다.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국민들이 붙여준 영광스런 칭호다.

그의 진면목은 무엇보다 청렴성에서 드러난다. 그는 대통령 당선 뒤 전 재산을 기부했다. 지도자는 재산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자본주의는 계약자유와 소유권 절대, 원칙 아래 성장했다. 해결은 "인간의 자유의사가 외부에 표현된 것이 소유권이다"고 말해, 재산권을 인간 의지의 발로로 규정했다.

풀려난 것이다. 반론도 거졌다. 무정부주의자 프루동은 "재산은 도둑질, 산물"로, 마르크스는 "부르조아의 착취물"로 규정되었다.

기업가 부를 이룬 미국 갑부들의 기부는 유명하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은 지난해 전 재산 440억달러의 85%를 자선기금으로 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집 한 채를 제외한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는 물론 타 후보측은 "매패행위" "국민과의 뒷거래"라며 비판하고 있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 222-8111